

이번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론 전망... '최초안' 제시도

최임위, 20일 6차 회의...차등적용 막판 논의·표결 예상 공석위원 '대리표결' 논의도...업종별 차등 부결 가능성 22일 勞 최초안 제시 "1만2천원 넘을듯"...使는 미지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표결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르면 주 후반에는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노사의 '최초 요구안' 제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다 급격한 인상 속도로 숙박·음식 같이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종을 고려해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반면 노동계는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과 낙인 효과를 유발할 뿐이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흐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노사가 6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평행선만 계속 달릴 수 있어 표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이달 말(29일)인 데다 최대 쟁점인 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임위에 '노사 동수 구성'을 촉구했으며, 공석위원은 대리 표결 사유에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불발 시에는 이 역시도 표결이 예상되나, 공석위원 제시안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 표결 문제가 정리되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공석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같은 공석위원들로 구성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8시간 '끝장토론' 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6차 회의에서 결론 나다면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논의는 오는 22일 예정된 7차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며 노사에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20일까지는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에 집중하고, 22일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의 직전에는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초안 제시 근거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초 선제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한 근로자위원은 "최임위에 공식 제출하는 최초안은 최근 발표된 올해 적정 가구 생계비 등을 반영해 미세 조정될 것"이라며 "1만2000원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

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날 경영계가 최초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한 사용자위원은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고, 노동계가 최초안으로 1만2000원을 계속 고수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경영계가 최초안으로 예년과 같이 '동결'을 제시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동결 이상의 카드인 '삭감'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노사의 힘겨투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변용일 기자



엔화가 905원 18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에서 외국인 환전을 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100엔당 1000원 안팎이던 원-엔 환율은 현재 900엔대 초반으로, 2015년 6월(최저 100엔=880원) 이후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환율·저유가 덕분에...항공株 일제히 반등

제주항공 6.48% 등 상승세

최근 부진했던 국내 항공주가 저환율, 저유가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1100원(4.75%) 상승한 2만4250원에 장을 닫았다. 아시아나항공도 450원(3.55%) 오른 1만314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6.48%), 진에어(6.03%), 티웨이항공(4.59%)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지면서 항공사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 부

담 역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분기 제트유 가격이 배럴당 93달러로 예상(105달러)을 밑돌면서 대한항공의 연료비 추정치가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데믹에 따른 여객 수요 회복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국제선 여객 운임도 제한적인 공급 증가로 하락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으나 노이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선욱 기자

기아, 전기 SUV 'EV9' 본격 출시...오늘부터 차량 인도

기아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 기본 모델을 19일 출시하고,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한다고 18일 밝혔다.

EV9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번째 모델로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다. 99.8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501km까지 주행 가능하다.

기본 모델 트림은 에어와 어스 2가지로 각 트림에서 2WD와 4WD 구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에어 트림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룹 등 첨단 주행 보조 기능과 핵심 편의 사양을 갖췄다.

어스 트림은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비롯해 운전석 에어코 모션 시트, 스티어링 휠 앰블럼 라이트, 듀얼 칼라 앰비언트 라이트, 12인치 대화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기본 탑재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에어 2WD 7337만원 ▲에어 4WD 7685만원 ▲어스 2WD 7816만원 ▲어스 4WD 8163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서울 지역 고객이 에어 트림 2WD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에 따라 6920

99.8kWh 배터리 탑재해 최대 501km 주행



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V9 GT-line은 주요 정부 부처 인증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3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는 EV9 구매 고객을 위한 멤버십 혜택과 할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72개월 또

는 84개월 전용 할부 프로그램 이용 시 선수를 30% 기준 각각 80만원, 70만원대의 월 납입금으로 EV9을 구매할 수 있고, 2년 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이슬비 기자

전셋값 보험세 이어질 듯...역전세·금리·임주물량 '변수'

상반기 전셋값 하락 폭 닻 달ছে 축소

올해 상반기 전세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 하락 폭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세 사기·역전세 우려가 크거나 임주 물량이 많았던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전셋값 낙폭이 둔화되면서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전세시장 주요 변수로는 역전세 심화 가능성과 임주 물량, 금리 변동 등이 꼽혔다.

◆닐 달 연속 전셋값 하락 폭 축소...-5.62%

1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종합(아파트·단독·연립) 전세 가격은 -5.62% 변동률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전셋값이 -7.41%로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5개 광역시 -4.96%, 기타 지방 -2.87% 순으로 떨어졌다.

다만 모든 권역에서 전셋값 하락 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은 1월 -1.98% 변동률에서 2월 -1.45%, 3월 -0.93%, 4월 -0.71%, 5월 -0.54% 등으로 닻

주 물량 등 변수

달 연속 낙폭을 줄였다.

수도권 전셋값도 1월에는 2.81% 떨어지며 역대급 하락 폭을 기록했지만, 2월 -2.01, 3월 -1.15%, 4월 -0.86%, 5월 -0.59% 등으로 축소됐다.

◆전세 사기 속출...전셋값 하락에 역전세 난 심화

상반기 전세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전세 사기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심화였다.

지난해 말부터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속출했다. 이에 정치권은 전세 사기 피해를 돕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사기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심화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셋값 약보합 전망...금리·임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세시장 주요 변수로 역전세난과 임주 물량, 금리 변동 상황 등을 꼽았다.

전세가격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락 폭이 둔화되면서 보험세를 보이겠지만 임주 물량이 많거나 역전세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낮고, 역전세 우려도 비아파트 유형보다는 덜 하다"라며 "최근 들어서는 시중금리 인하로 삼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역전세 가능성과 임주 여파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 유형에서는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임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험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앞으로의 금리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 이슈가 안정화될지 여부 등도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